

농촌 현장의 소리 [8월]

※ 문의: 미래정책연구실 조사동행팀 승준호, 김미리(061-820-2267, 2159)



본 자료는 연구원이 전국 시군의 농업경영인 1명씩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KREI리porter'가 보내온 농촌 현장여론과 정책제언입니다.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전달한다는 취지로 가감 없이 요지만 정리하였으며, 연구와 정책수립에 활용되길 바랍니다.<편집자 주>

□ 개요

- 수집기간: 2017. 8. 1. ~ 8. 30.(총 50건)
- 수집대상: KREI리porter
- 수집방법: 온라인사이트, 이메일, 팩스, 우편, 지역간담회

□ 최저임금 인상정책에 따른 농업분야의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 **인건비 상승으로 인력수급 문제 해결할 수 없어... 임금인상에 따른 정부 지원 있어야**
 - 현재 농업은 인력 수급이 매우 어렵고 수익성 또한 매우 낮은 구조이다. 때문에 시급이 인상된다고 노동력이 늘어날 가능성은 적다. 국내 인력조달에 한계가 있어 외국인 노동력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따라 벌써부터 인건비를 올려 달라는 근로자의 요구가 많다. 농업 인건비 상승에 대해 정부 보조가 필요하다.<김○○, 경북>
 - 시설채소 농가는 외국인 근로자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오히려 해마다 외국인 모셔오기를 해야 한다고 표현할 정도이니 농촌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두 번째 문제라고 본다. 식사, 숙소 제공을 기본 제공하면서 이미 내년도 최저시급을 웃도는 임금을 주고 있음에도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임금 외 부대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해주어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 해주기 바란다.<이○○, 강원>
 - 과수의 경우, 여자는 6만 5천 원에서 많게는 7만 5천 원, 남자는 8만 5천 원에서 10만 원을 일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게다가 출퇴근 지원, 오전·오후 간식, 점심

식사 제공의 조건이 추가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농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농산물 가격을 인상하거나 임금 상승폭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김○○, 경남>

- 논농사는 그나마 많은 기계화를 이루었지만 밭작물, 특히 마늘, 양파, 배추 등 원예작물은 수확기 때마다 노동력이 부족하여 웃돈을 주고 인력을 구하는 실정이다.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안기금의 인력 지원 규모를 확대해주시 바란다.<이○○, 전남>

- 농업 인력의 연령대는 60대에서 80대까지로, 생산성이 크게 차이나지만 인건비는 동일하게 주고 있다. 때문에 비교적 젊은 편인 외국인근로자를 많이 활용하는데, 이들도 요구사항이 많고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에 한해 임금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최○○, 경북>

- 인건비 상승에 따른 외부노동력 확보의 어려움과 농가 소득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등교육이나 대학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농가 현장학습, 사회복지요원의 농촌 대체복무, 농촌 봉사활동으로 공무원 가산점 부여 등의 방법이 있다. 이러한 외부노동력을 무상, 혹은 저렴한 자부담금으로 농가에서 이용할 수 있게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면 농가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혜택(내수 활성화로 인한 농산물 소비, 판매 증가 등)을 더 누릴 수 있을 것이다.<이○○, 충북>

- 정부기관이나 기업 등과 농업은 소득구조 자체가 다르다. 최저임금은 분야 및 업종별로 차등하여 인상해야 한다. 농업 인건비가 현재보다 더 인상되면 농사 규모를 줄여 가족농 형태로 전환하는 농가가 늘어날 것이다. 우리나라 농산물 가격은 생산원가도 미치지 못할 때가 많다. 이렇게 가격보장이 안 되어도 수입은 계속 늘어만 간다. 농업에서 임금이 인상되는 만큼 정부나 농협에서 일부 부담해야 한다.<류○○, 경남>

○ **농산물 가격은 십여 년 전 그대로.. 인건비 상승 폭 만큼 농산물 가격 올라야**

- 인건비가 상승되는 만큼 생산성이 올라야 하는데,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 대부분이 고령이라 생산성이 낮은 편이다. 또한 농산물 가격이 십여 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으니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담이 더욱 크다. 최소 경영비를 보장하는 수준의 하한가를 정하여 농산물 가격을 올리고, 소득을 보장해주기 바란다.<김○○, 경기>

- 도시 소비자들은 배추 한 포기 3천 원이 비싸다고 울상이고 언론에서는 장비구니 물가가 올랐다고 농산물만 가격만 운운하지만 실제 농업인들은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자신의 인건비만 겨우 건지는 형편이다. 20년 전 하루 일당은 3만 원이었다. 인건비도 오르고, 모든 공산품의 가격은 올랐지만, 농산물 가격은 10년, 20년 전이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정○○, 경남>
- 농민의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실정에 임금만 오르는 것은 옳지 않다. 국민의 먹거리라고 해서 농산물 가격을 조절해 비싸지면 수입하고, 낮은 가격을 유지하니 농업인은 평균 소득을 보장받을 수 없다. 인건비가 올라도 농산물을 제값에만 받으면 고용주와 고용인 모두 웃을 수 있을 것이다.<김○○, 경북>

○ **인건비 비중 높아... 농업 소득은 오르지 않고 인건비 상승으로 농업 경영 위기**

- 현재 농촌의 중농 이상은 총 매출액의 50% 가까이를 인건비로 충당하고 있으며, 인력난에 시달려 농업을 계속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포기하는 농가들이 많다. 이 시점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치명적인 난관이다. 좀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하더라도 노동력을 확보하려는 경쟁으로 최저임금을 넘어 인건비는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은 오르지 않고 인건비가 계속 상승한다면 결국 경영은 파산될 것 이란 우려가 크다.<장○○, 충남>
- 대농은 인건비가 오르면 오를수록 기계설비 등 자동화를 통해 인력을 감소시킬 것이다. 우리 농가만 해도 고정인력 1인당 연 2천여만 원을 줘야 하는데, 기계로 대체했을 때 2년이면 그 비용을 상쇄할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인건비가 오른다고 인력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 생각한다. <박○○, 경북>
- 아로니아 1만 평을 농사지으며 바쁜 철에는 일당 8만 원을 주며 단기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정책과는 무관하게 턱 없이 높은 일당을 주고 있어 오히려 ‘임금 상한제’가 필요한 실정이다.<이○○, 경북>

- 농촌은 이미 최저시급 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오르는 추세다. 도시의 젊은이는 일할 곳이 없다고 아우성이고 시골은 일손을 못 구하고 너무 비싼 인건비에 아우성이다. 인건비가 오르면 농산물 값도 같이 올라야 하는데 농산물 값은 하락하고 인건비만 상승하니 이렇다 농사를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될 때가 많다.<김○○, 경북>
- 우리 사과농가의 경우 일당 7만 5천원에 점심과 새참 제공, 교통 등을 지원해 총 10여만 원의 인건비를 들여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현재 최저임금보다 높은 일당을 주고 있기 때문에 현 정책이 와 닿지 않는다.<임○○, 경북>

○ **인건비 상승 및 인력 부족으로 영농규모 축소 및 가족농 형태로 전환 추세**

- 인건비가 지속해서 상승한다면 농업의 고용형태는 여러 가지로 변화될 것이다. 자가 농업보단 임대농업이 많아질 것이며, 가족단위 규모로 축소 또는 분산을 통한 인건비 지출을 최소화하고, 생산단가가 적거나 고부가가치 농산물에 접근하려고 노력할 것이다.<현○○, 제주>
- 최저임금이 내년엔 오른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지금도 7천 원대를 주지 않으면 사람 구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일에 숙련된 사람이라면 1만원을 주어도 문제 되지 않는데 단순 알바의 개념이면 그저 시간만 때우려고 할 텐데 손해가 크다. 최저 임금 인상 정책에 따라 우리 체험농장은 인건비 지출을 최대한 아끼기로 했다. 일정 수준의 인원 이상일 경우에만 단기인력을 고용하고, 주말에는 학교 다니는 아이들까지 온 가족이 농장 일에 투입되어 가족 중심의 형태로 바뀌고 있다.<도○○, 충남>
- 전문적인 영농기술을 가진 분들은 대부분 연로하였거나 사망하여 최근 일손 부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농촌 일손 돕기 일환으로 오는 대학생들은 기술이 없어 사실상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인력에 의존해 활용하는 데 한계에 달았다. 가족끼리 해나갈 수 있을 정도로 영농규모를 축소해 적정 소득만을 유지하는 형태로 변화해나가야 한다.<박○○, 충남>
- 농장주보다 노동자가 더 많은 수익을 본다면 아마도 대농의 구조에서 가족농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며, 이것은 오히려 농업구조를 건전하게 만들어 갈 수

있다. 일부 값싼 농축산물의 생산은 저임금, 노동 착취가 바탕에 있고 이를 통해 독점생산하려는 욕심이 불러온 것이라 생각한다. 이제는 농업의 구조가 가족농의 형태로, 건강한 농산물을 적절한 수준에서 생산하는 구조로 변화해야 한다.
 <변○○, 강원>

○ **농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타 산업과 구분된 최저 임금제를 도입해야**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 평균 소득이 3,719만 원이었다고 한다. 그 중에 농사로 얻은 수익은 1,006만 원에 불과한 반면, 도시 근로자의 연평균 수입은 5,334만 원을 초과한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저렴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최저 임금을 따져보면 2017년에는 22,524,750원, 2018년에는 25,625,250원을 지급해야 한다(연도별 최저시급×225시간×13개월(12개월+퇴직금)+숙식비(30만 원×12개월=360만 원)를 계산한 금액). 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농가 소득과 차이가 거의 없다. 시급 1만 원 시대에는 역전될 수 있다. 정부는 산업별로 각기 다른 최저 임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주>
- 수십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몇몇 기업농에 적용되어야 할 법이 일반 영세농 까지 똑같이 적용되어 인건비 상승 부담이 늘어나고 생산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 ‘농민’이란 신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제, 세법 등은 물론 이거니와 관계되는 모든 법률을 적용하는데 농민을 어떻게 규정하고 적용할지에 대한 것이 명확해야 한다. 매출액, 규모 등 일정수준의 기준을 마련하여 기업농과 영세농을 구분하여 적용해야 한다.<강○○, 제주>
-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이 많은 우리나라는 인건비가 오르게 되면 비용 증가로 기존의 근로자를 퇴사시켜야 하는 상황이 일어난다. 즉, 일자리를 줄여 조금 인상된 임금을 나누어 갖자는 이야기다. 최저임금 인상은 농어업에 있어서는 예외를 두어야 한다.<정○○, 충남>
- 농촌에서는 관행적으로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한다. 점심과 새참시간을 제외해도 통상 10시간을 일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하는 데 있어 계절과 날씨의 영향이 크다. 그런데 다른 산업과 임금체계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업종별, 지역별 차등이 필요하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임금도

국내인과 차등 지급되어야 한다. 현재 국내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지급되고 있으나 이들이 벌어들인 소득은 국내에서 소비하지 않고 자국으로 보내진다. 농업에서의 최저임금 정책은 타 산업과 달리 적용될 수 있도록 더욱 면밀히 검토해 실행해주기 바란다.<박○○, 전북>

○ **경쟁력 있는 상품개발 및 기계화로 노동집약적 영농방식의 전환 필요**

- 최저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역설적으로 그만큼 소득 창출이 안 되는 작목을 계속 해야 하는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농업의 구조 조정을 촉발해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또는 기계화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이○○, 충남>

○ **최저임금 인상은 농촌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

- 최저임금이라 함은 적어도 그 수준은 받아야 기초생활이 가능할 것이란 의미일 것이다. 때문에 꼭 그만큼이 아니라 그보다 더 위로 책정해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는 일에 대한 소명의식과 책임감을 갖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임금은 적게 주면서 일은 많이 하길 바란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 농촌도 도시처럼 충분히 높은 임금과 좋은 근무조건을 만들어가야 한다.<김○○, 전남>

- 임금문제를 논하기 전에 앞으로 농업이 나아갈 길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생계를 위협할 정도로 넉넉하지 못한 현실은 비전이 없다. 젊은이들이 농촌을 찾지 않는 이유이다. 선진국은 일하는 방식이 우리와 매우 다르다. 막무가내 일을 부리거나 여가 없는 타이트한 생활이 계속되는 삶은 미래가 어둡다. 근로자를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노동시간을 줄여 최저임금을 지급해준다면 농촌 삶의 질은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것이란 생각이다.<조○○, 충남>

- 2018년에 인상되는 최저 시급이 7,530원인데, 이는 8시간 일해 봐야 월 6만 원 밖에 되지 않고 20여일을 일해도 월 120만 원의 급여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현재 물가상승에 비해 턱없이 적은 금액이라 생각한다. 농촌의 젊은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면 임금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김○○, 경북>

○ **실효성 있는 인력 수급 정책 마련 요망**

- 현재 우리 시에서는 인력 제공풀(pool)에 등록을 하면 인건비의 일정액을 보조해

주는 제도가 있다. 하지만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농가가 많고, 노동자 측에서 등록을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 등의 문제로 유용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 지자체가 농촌 인력 풀(pool)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여 더 많은 농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농가의 인건비 문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이○○, 충북>

- 해마다 인상되는 최저임금은 그 자체가 많은 금액이 아니다. 그러나 아직도 최저 임금조차 지급되지 않는 곳이 있는데, 무작정 올리는 것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지, 잘 시행되고 있는지 관리점검을 하는 것도 정책을 결정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이○○, 전남>

- 농촌에서는 최저임금이 문제가 아니다. 인력이 부족해 자연스럽게 임금이 올라간 상황인데 불구하고 젊은 인력은 구하기 어렵다. 때문에 대부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이들의 나라에서는 몇 개월 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을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어 퇴직금까지 지급하고 있다. 국내 농업의 현실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인력 수급이 우선 시급한 실정이다.<김○○, 경기>

- 농업인의 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본다. 이미 최저임금 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도 사람 구하기가 힘든 실정이다. 우리 과수원의 경우, 과거에는 15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했으나 현재는 인력이 부족해 가족과 두 세 명의 근로자만이 일을 하고 있다. 농촌의 열악한 인력난을 해소하기에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소용이 없다.<박○○, 강원>

- 현재 소농의 입장에서는 인건비 줄 돈이 없어 인력을 쓰지 못하는 입장이다. 대학생 농활 등 인력을 단기 동원한다해도 전문 인력이 아니기에 효율성이 떨어진다. 인건비에 대한 부담과 인력 고용의 안정성 등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당장 임금을 올린다 하면 농업의 미래는 없다. 인력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 가족끼리 해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지만 옛날처럼 대가족도 아닐뿐더러 그만큼 생산량과 품질이 떨어질 수 있어 걱정이다. 농사일 자체가 능률이 매우 떨어지는 일이라 스마트팜을 이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 또한 낮은 농가소득으로는 빛만 더할 뿐이다.<염○○, 경기>